

"역사 부정의와 국가책임 : 해외입양의 불법성과 국가책임" 토론문

토론자: 신필식 (중앙대)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은 인권 책무에 대해 검토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해외입양이라는 올해로 70년을 맞는 한국의 오랜 아동구호 실천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던 불법성과 비인권적 특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라미 교수님의 발표문에 관한 토론을 맡았습니다. 해외입양은 본 대회의 주제인 한국 사회의 인권 책무의 시공간이 어떻게 넓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 넓어짐은 기존의 한국이란 공간의 인권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 살피는데 적합도가 높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해외입양은 1953년 4명에서 시작해 1985년 8천8백57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몇 차례의 중단 선언과 번복을 거쳐 2022년 백42명이 해외로 입양되기까지 (백명 이상의 입양국 기준) 13개 국가로 17만 명이 입양된 시간적·공간적 폭뿐만 아니라 아동의 특징에서도 국적, 연령, 인종, 언어, 문화적으로 공통점과 다양성, 차이를 함께 내포하는 역사적·개별적 집단의 공통경험을 지칭합니다.

소라미 교수님께서 검토하고 확인해주신 발표내용을 통해 특히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 제도, 법령, 정치적 결정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가운데 해외입양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비윤리적 해외입양 실천은 무엇이 있었으며, 그러한 불법성에 대해 국제적 인권 규범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① 기존의 시각을 재검토함으로써 국가가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은 어떻게 가능할지, ② 그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떠한 변화와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질문해보고자 합니다.

해외입양에 대한 기존 시각에 대한 재검토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해외입양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 임시적 아동구호로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혼혈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일시적 구호이자 생부의 국가인 미국으로의 이주로 끝날 것을 전제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70년에 걸쳐 지속되었고 그러한 연장과 더 나아가 상시적이고 적극적 아동구호 방식으로 변화한 것은 한국 사회와 시민은 물론 한국 정부에 해외입양이 최선 또는 차선으로서의 해외입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오랜 관성으로 남아있는 해외입양의 인도주의적이며, 불가피하지만 아동에게 이로운 기회와 삶의 조건, 가정을 제공한다는 믿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해외입양의 불법성과 비윤리성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으며 반발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해외입양인보다 '홀트'로 대변되는 해외입양기관들은 아동복지기관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자신들의 실천이 의미하는 바를 긍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실천으로 인식하도록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2020년대에 접어들며 2020년 양천아동학대사망 사건과 2022년 질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6개국 3백72명의 해외입양인이 자신들의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전후한 국내의 입양기관과 해외입양에 대한 보도의 변화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해외입양 논의의 중심이 해외입양인에게서 해외입양기관, 해외입양 과정, 해외입양 관련 정부의 제도로 옮겨지면서 기존의 불법적 해외입양이 극히 소수의 해외입양인이 겪었을지 모르는 개인적 불행으로 여겨지던 것이 점차 구조적 한계와 제도적 방임, 불법에 대한 묵인과 방조, 해외입양 기관의 불법적 입양수수료 징수, 입양기관 간 불법적 아동인수 경쟁 관행의 지속 등 지금까지 연결되지 못하던 개인적 불행과 구조적 모순이 연결되면서 기존 시각에 균열이 조금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미 교수님의 발표문은 해외입양 과정에서 오랫동안 형성되고 관행처럼 여겨지던 해외입양기관의 입양 절차가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었고, 정부는 이때 어떤 당시 규정이 있었는지, 혹은 정부의 규정 자체가 해외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 입양을 촉진하기에 급급하면서 반인권적 형태로 변형되었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를 통해 전반적인 입양 절차로서 친생부모 동의와 기록에서의 불법성, 대리입양과 과다한 입양수수료, 사후관리 부재와 뿌리찾기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해외입양을 더 많이 쉽게 보내는 것이 아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긴 정부와 입양기관의 전제 속에 절차상의 보장되었어야 할 해외입양인 인권이 지켜지지 못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입양 불법성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의 전제 조건

해외입양에서 국가(더 정확히 정부)의 불법성 논의는 기존의 해외입양에 대한 인식을 하나씩 확인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 기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요소의 유형과 실제 사례, 관행화된 양상 등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해외입양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재검토는 물론 불법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면 실제 그러한 불법성이 언제, 얼마나 많이, 왜 어떤 과정으로 실제 해외입양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입양의 제도적, 관행적 불법성과 비윤리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과거 정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후의 정부가 진다는 인식보다는 인권과 국제인도법적 차원에서 중대한 위반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한 의무로 보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제관습법에서 대량 학살,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조사와 처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금지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해외입양 인권 침해가 국내에서 논의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피해 당사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의 기준 법 규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무엇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인지 혹은 무엇이 불법적인 입양인지를 사실상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입양인의 친생가족도 자신들이 경험한 해외입양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할 기준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해외입양 친생가족임을 드러내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해외입양인과 해외입양 친생가족이 해외입양 과정에서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받는 것을 인식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지난 70년 간의 해외입양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담론이 입양기

관이나 정부가 제시한 인도주의적 해외입양 담론에 치우쳐 실제로 다양한 절차에서 입양인과 친생가족이 경험한 모순이 쉽게 드러내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설령 개인적으로 입양인과 친생가족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더라도 사실상 인권 침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개인정보로서 해외입양인의 기록과 인권침해 사례는 전체 해외입양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해외입양인이 한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개별적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국가는 민간 해외입양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해외입양 절차에 관한 기록문서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때도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공간적 제약과 기록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은 최대한 가능한 광범위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해외입양인이 해외입양 절차상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관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더욱 확대하여 추가적인 정부 차원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접수 받거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존의 해외입양 절차에 대한 불법적 요소를 확인하고 책임을 다하는 친권 침해에 대한 윤리적·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입양 절차가 법적으로 70년 간 대부분 절차를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하도록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직접적인 인권 침해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인권 침해 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입양 관행이 정부의 권력적 개입 구조, 법적·제도적 불법성 여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방임·방조 구조에 대한 적절한 사실 규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은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 추구 활동으로 대대적 조사와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져, 인권 침해의 진실이 확인된 이후 가능할 것입니다.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의 실질적 조건

해외입양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직 피해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 발생에서 국가가 분명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 그리고 해외입양에 대해 국가책임이 확인된다면 이것은 어떠한 실질적 변화를 포함하는 것일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해외입양인과 해외입양인 친생가족(친생가족과 현재 가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외입양이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식한다면 그 침해에 대한 확인과 조사 과정에서 해외입양 절차에 의해 피해를 본 해외입양인과 해외입양인의 친생가족, 해외입양인의 현재 가족은 주체이자 권리를 가진 당사자이자 전문가로서 피해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는데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해외입양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입양아’라는 말처럼 입양인은 언제까지나 아이로 머무르지 않으며, 성인이 되었고 자신들의 삶과 경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국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조직을 만들어 진실 화해위에 조사 신청하고 자신은 물론 해외입양인 커뮤니티의 존엄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찾고, 출생국 한국이 변화시키고, 진실을 추구하도록 촉구하는 권리 주체로 자라났습니다. 해외입양에 국가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해외입양인, 해외입양인의 가족 특히, 해외입양인 인권 침해 상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친생가족의 참여로서 해외입양 과정의 고통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해외입양 관련 기록 공적 관리와 당사자 제공 및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해외입양인이 침해 받은 중요한 권리의 하나가 개인과 해외입양인 집단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 입양기록을 제공·확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친생가족 찾기에서의 필요를 넘어 해외입양인이 자신의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외입양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입양기록을 공적 관리로 전화하고 최대한의 접근권을 입양인에게 보장할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가족찾기와 관련된 책임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불법적 절차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상은 피해자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것이며, 이러한 배상은 책임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발 방지 보장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강제추방 해외입양인이 홀트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해외입양인과 해외입양인 친생가족 등 직접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후손에게 과거 인권 침해로 인한 피해상황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의 목적과 범위는 무엇이 해외입양의 불법성을 규명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가해 혐의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범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더 나아가 그 피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 사과와 배상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실질적 책임이 드러나는 주요한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넷째, 해외입양 인권 침해 당사자에 대한 치유와 재활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 당사자의 범주는 해외입양인뿐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입양인 친생가족을 포함하며 넓게는 해외입양인의 현재 가족과 후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된 숭실대학교 노혜련 교수님 연구팀의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장 방안 연구』(2022)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40명의 해외입양인과 5명의 해외입양인 친생부모의 질적 연구는 해외입양이 일생의 트라우마로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자살 시도, 중독을 포함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지금도 해당 당사자가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해외입양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피해 생존자로서 당사자와 그 가족이 겪은 피해에 대한 의학적, 심리·사회적 치유와 재활의 제공 책임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와 관련 책임당사자의 사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의 공개적 사과는 해외입양 관련 주체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에 있어 필수 요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과의 성격이 피해 사실 인정과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과거의 해외입양 절차 전반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과에 있어 정부와 민간 입양기관이 행한 사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의 민간 입양기관은 물론 입양국 측 입양기관, 입양국이 입양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 양상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국내와 국제적 차원의 공동조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해외입양 인권 침해의 재발 방지 보장과 기억의 과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과거 해외입양의 불법성이 발생한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변화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과거의 피해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과정은 폭력적인 과거를 해결하고 화해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일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일어난 권리 침해와 이를 초래한 조건과 양상, 책임은 물론 현재까지 이어지는 피해를 밝히고 공개하고 기억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발 방지 보장에는 법적·제도적 개혁, 관련 절차에서 책임관련자에 의한 범죄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 보장은 미래 세대가 과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된 유산을 보존하고 기억하고 일반인이 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출생국으로서 한국 사회, 입양국으로서 입양국 사회와 정부가 해외입양인 공동체가 겪은 권리 침해를 기억하고 나아가 희생된 당사자를 추모하는 교육·예술·문화적 활동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입양 인권 침해와 국가

피해자가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피해를 겪었지만 자신이 피해자인지 인식하지 못한 개인이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진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주체의 협력과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입양인 인권피해가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피해가 아닌 인도주의적 구호 행위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개별적 피해를 부정해왔던 관성은 아직도 그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시작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진실이며, 이는 불법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사를 통한 확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를 본 해외입양 당사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참여의 보장, 기록의 제공, 사과와 배상, 재발 방지와 기억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이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를 알고 치유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해외입양에서 지금껏 정부가 개입됨으로써 또는 책임을 다하는 개입을 앎음으로서 발생한 각종 인권 침해에 관한 진실을 마주하고, 치유와 화해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함으로써 가능하고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입양 70년을 맞아 그러한 국가적 차원의 인권 침해를 확인하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앞서 살펴본 여러 과제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들뿐 아니라 한국 사회와 정부, 국가가 인권과 인권 보장의 범주, 그 과정에서의 국가 책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길로 이끄는 데 귀중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